

2020학년도 모의논술

논술문제 해설지
인문계

[교사용]

논술문제 해설지 (인문계)

■ 2020학년도 모의논술 개요

2020학년도 모의논술(인문계)은 우리학교 2019학년도 수시모집 논술전형 문제의 기본 골격을 유지하는 방식으로 출제되었다. 분류 요약형, 평가형, 논술형 등 기존의 문제 유형들을 그대로 따랐으며, 하나의 주제 하에서 3개의 문항이 유관성과 차이를 동시에 지니도록 하였다.

2020학년도 모의논술은 2019학년도 논술시험에서와 같이 고등학교 교육과정과의 연계를 염두에 두고 출제하였다. 논술문제의 전체 주제인 ‘소수자 우대 정책’은 고등학교 『사회·문화』 교과서 ‘문화의 다양성’ 단원의 ‘다문화 사회와 문화 다양성’, ‘사회계층과 불평등’ 단원의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차별 현황과 개선 방안’, ‘사회 정의와 불평등’ 단원의 ‘다양한 정의관의 특징과 적용’, ‘사회 및 공간 불평등 현상과 정의로운 사회’ 부분 등에서 다뤄지는 것으로, 고등학생들에게 낯설지 않은 주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문제 1]의 <보기>와 제시문은 고등학교 교과서 내용에 잘 맞는 학자들의 저술에서 발췌하였으므로 충분한 가독성을 지녔을 것으로 판단된다. [문제 2]와 [문제 3]에 사용된 <자료>와 논제도 고등학교 교과과정 수준을 넘어서지 않는 것들로써 소수자 우대 정책이라 할 수 있는 ‘여성고용할당제’와 ‘지역인재 채용할당제’의 주요 내용과 관련된 사회적 지표들을 이번 모의논술 문제에 맞추어 정리한 것이다.

논술문제 해설지 (인문계)

■ 평가항목과 문항별 배점

전통적으로 우리학교의 논술시험은 텍스트에 대한 독해력, 비판 능력, 그리고 이를 활용한 문제 해결 능력 그리고 서술력을 주로 평가해 왔다. 이러한 방향성은, 대학에서의 학업수행 능력에 대한 평가라는 논술 시험의 기본 취지가 달라지지 않는 한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다.

○ 평가항목

- ① 문제해결이 잘 이루어졌는가, 즉 발문이 요구하는 답안 내용이 충분히 들어있는가: 50%
- ② 논리적 전개 혹은 구성은 잘 되었는가: 20%
- ③ 표현력 및 어법: 15%
- ④ 창의성: 15%

※ 답안의 다양성을 감안할 때 위의 항목 ②,③,④의 비중은 요구되는 답안글의 형식,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 문항별 배점

[문제 1] : 30점

[문제 2] : 40점

[문제 3] : 30점

○ 채점등급별 점수

[문제 1], [문제 3]

- ① A 등급: 30점
- ② B 등급: 24점
- ③ C 등급: 18점
- ④ D 등급: 12점
- ⑤ E 등급: 6점
- ⑥ F 등급: 0점

[문제 2]

- ① A 등급: 40점
- ② B 등급: 32점
- ③ C 등급: 24점
- ④ D 등급: 16점
- ⑤ E 등급: 8점
- ⑥ F 등급: 0점

논술문제 해설지 (인문계)

■ 문항별 세부 채점지침과 채점등급

[문제 1] <제시문 1>~<제시문 4>는 <보기> 속의 정책에 관한 견해를 담고 있다. 제시문들을 서로 다른 두 입장으로 분류하고, 각 입장을 요약하시오.(30점)

【 채점지침 】

[문제 1]은 <보기> 사례를 통해 논점을 파악하고 이를 중심으로 제시문을 상반된 두 입장으로 분류한 다음 각 입장을 논지를 요약하라는 문제이다. 좋은 답안 작성의 포인트는 <보기>와 제시문이 ‘소수자 우대 정책’이라는 주제로 묶인다는 것을 이해하고 각 제시문의 중심 주장과 근거를 정확하게 포착하여 이를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요약문을 작성하는 것이다. 특히 제시문들이 <보기>의 소수자 우대 정책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이해한 후 분류, 요약할 수 있어야 한다. 제시문의 난이도는 고등학교 국어영역 수능 문제 수준을 넘지 않도록 하여 수험생들의 정확한 분류 및 요약 능력을 측정하고자 했다.

<보기>는 대학 입학시험에 불합격한 학생에게 대학 측이 보내는 통지문이다. 이 통지문에 따르면 불합격의 이유는 입학 자격 미달 때문이 아니라 사회가 요구하는 ‘특별한 조건’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는 이 대학이 합격과 불합격을 결정함에 있어 별도의 기준, 즉 소수자의 우대 기준을 활용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에 의거해 본다면 <제시문 1>~<제시문 4>는 ‘소수자 우대 정책’을 지지하는 입장과 반대하는 입장으로 대별할 수 있다. 이는 각 제시문들이 소수자 우대 정책의 취지나 내용, 효과 내용 등에 대한 나름의 주장과 근거를 포함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구체적으로 <제시문 2>, <제시문 4>는 소수자 우대 정책에 반대하는 입장으로, <제시문 1>, <제시문 3>은 우대 정책을 지지하는 입장으로 분류할 수 있다. 기본적인 독해 능력을 갖춘 학생이라면 어렵지 않게 분류할 수 있을 것이다. 각 제시문의 논지를 간략히 서술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제시문 1>은 성공적인 삶을 위한 조건 중 하나로 훌륭한 롤 모델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이 롤 모델이 특히 같은 부류의 사람들일 때 더욱 효과적일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한다. 따라서 <제시문 1>은 같은 부류의 롤 모델이 소수자들의 자기개발에 큰 효과가 있다고 보고 소수자 우대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리고 <제시문 3>은 사회정의 실현 측면에서 소수자에 대한 정당한 대우를 역설한다. 예를 들어, 기업은 배타적으로 이윤을 추구하는 집단이 아니라 사회 전체의 통합과 복지에 대한 의무를 가진 조직이기 때문에 구성원을 선발함에 있어 여성과 같은 소수자를 배려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소수자 배려는 사회적 자원의 공정 분배와 직결되는 것이며 정의의 원칙에 부합하는 것이다. 따라서 <제시문 3>은 사회정의의 실현이라는 측면에서 소수자 우대 정책을 지지하는 입장으로 해석할 수 있다.

논술문제 해설지 (인문계)

반면 <제시문 2>는 개인의 노력과 경쟁을 통한 성취를 강조한다. 탁월한 능력과 노력으로 인종장벽을 극복한 야구 선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개인의 사회적 성취는 능력과 노력에 달린 것이다. 이 맥락에서 소수자라 해서 특별한 배려나 우대를 요구하는 것은 정당하지 못하기에 <제시문 2>는 공정 경쟁과 노력에 따른 보상의 필요성이라는 측면에서 소수자 우대 정책에 반대하는 입장으로 볼 수 있다. <제시문 4>는 배상 책임의 주체와 범위에 대한 논의를 통해 소수자 우대가 필요한 것인지를 논한다. 특정 개인이 사회적으로 불이익이나 차별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사과나 배상을 가해자가 아닌 사회에 요구할 도덕적인 권리는 없다. 즉 누군가에 의해 발생한 피해를 사회가 구제해 주기를 요구하지 말고 개인적 노력을 통해 극복해야 하는 것이다. 이 맥락에서 소수자 우대 정책은 가해자가 아닌 사회가 소수자들이 받은 차별이나 불이익을 해결하는 것이기에 정당화 될 수 없다. 따라서 <제시문 4>는 배상 책임과 주체의 측면에서 소수자 우대 정책에 반대하는 입장으로 정리할 수 있다.

이와 같이 각 제시문의 입장 및 중심 논지를 정확하게 정리한 다음 같은 입장으로 분류한 제시문들을 하나의 통일된 글로 요약 정리한다면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 특히 논지 정리 과정에서 같은 입장으로 분류된 제시문 사이의 논점 차이까지 고려하여 글을 작성한다면 우수한 답안이라 할 수 있다

【 채점등급 】

- A : 제시문을 올바르게 분류하고, 그 핵심 논지의 차이까지 두루 고려하여 잘 기술한 답안
- B : 제시문을 올바르게 분류하고 두 입장의 핵심 논지를 잘 분석하여 기술하고 있으나, 각 제시문의 차이점을 효과적으로 부각시키지 못한 답안
- C : 제시문 분류는 올바르게 하였으나, 각 입장의 핵심 논지에 대한 요약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답안
- D : 제시문 분류는 잘못했으나 핵심 논지 서술은 어느 정도 이루어진 답안
- E : 제시문 분류에도 실패하고 논지 서술도 제대로 안된 답안
- F : E 등급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답안

논술문제 해설지 (인문계)

[문제 2] 아래 <자료 1>과 <자료 2>는 ‘여성고용할당제’를 오랫동안 시행해 온 국가 A와 시행하지 않은 국가 B의 경제·사회와 관련된 내용을 담고 있다.(단, 여성고용할당제 외 다른 조건들은 동일하다고 가정한다.) <자료 1>과 <자료 2>를 해석하고, 이를 토대로 [문제 1]에 나타 난 두 가지 입장을 각각 정당화하시오.(40점)

【 채점지침 】

[문제 2]는 소수자 우대 정책 중 하나라 할 수 있는 ‘여성고용할당제’를 지속적으로 시행한 나라와 시행하지 않은 나라에서 확인할 수 있는 여러 사회 경제적 지표를 해석하고 이를 활용하여 [문제 1]의 소수자 우대 정책에 대한 두 입장을 각각 정당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자료 1>은 여성고용할당제를 시행한 국가와 그렇지 않은 국가 사이에 성별 간 갈등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 차이가 난다는 것과 두 국가의 고용형태, 여성 기업임원 비율, 경제 성장률 등이 상이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두 표로 구성되어 있다. 여성고용할당제를 지속적으로 시행한 A국은 그렇지 않은 B국에 비해 국민들이 성별 간 갈등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음이 확인된다. 특히 A국 국민의 36% 이상이 성별 갈등이 심각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성별 갈등이 A국의 중요한 사회 문제일 수 있음을 보여준다. 한편 A국은 B국에 비해 전반적인 경제 지표도 좋지 않다. 기업의 여성임원 비율에서는 미세하게 높은 수치를 보여주지만 불안정한 일자리인 비정규직의 비율이 두 배 정도 높고 경제성장률은 절반 정도 수준이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두 자료의 내용을 종합하면 <자료 1>은 여성고용할당제라는 소수자 우대 정책이 A국의 사회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끼쳤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여성고용할당제를 장기적으로 시행함으로써 사회적 갈등이 증폭되는 한편 고용상황이 상대적으로 불안정 해지고 이에 따라 경제성장이 둔화 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문제 1]에서 소수자 우대 정책을 반대하는 입장을 정당화하는 근거가 될 것이다.

한편 <자료 2>는 두 국가 여성의 대학 전공별 비율과 경제 활동 관련 지표를 보여준다. A국의 여성들은 B국 여성들에 비해 대학에서 다양한 영역의 전공을 고루 공부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B국 여성들의 절반 이상이 교육과 인문학을 전공한 것에 반해 A국 여성들은 공학이나 과학 영역의 전공자들도 많다. 이는 A국 여성들의 경우 여성고용할당제의 효과로 어떤 전공을 공부하던 취업이 상대적으로 수월할 수 있기 때문에 남성들이 주로 전공하는 영역까지 활발하게 진출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반면 B국 여성들은 여성고용할당제의 효과를 누릴 수 없는 상태에서 상대적으로 남성들과 경쟁하기 수월한 영역의 전공에 집중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표 4>에 따르면 A국과 B국 남성들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거의 차이가 없지만, 여성들의 참가율은 10% 이상 A국이 높다. 또한 B국 여성들은 A국 여성에 비해 보수를 받을 수 없는 노동에 참여하는 시간이 높으며 평균 임금 수준도 낮은 편이다. 이는 A국 여성들에 비해 B국 여성들이 불리한 조건에서 노동에 참여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내용을 종합하면 <자료 2>는 여성고용할당제를 시행한 A국이 B국에 비해 제도의 긍정적 효과를 누리고 있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여성고용할당제를 통하여 여성의 취업을 보장함으로써 다양한 전공을 공부한 여성 인력을 확보하고 있으며, 여성들은 B국에 비해 좋은 조건하에서 활발하게 경제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누리기 때문이다. 이는 [문제 1]에서 소수자 우대 정책을 찬성하는 입장을 정당화하는 근거가 될 것이다.

논술문제 해설지 (인문계)

답안 작성을 위해서는 각 자료의 핵심 내용을 여성고용할당제 효과와 연관 지어 구체적으로 해석한 다음 이를 근거로 [문제 1]의 두 입장을 각각 정당화해야 한다. 특히 정당화 과정에서 자료의 내용이 특정 입장을 정당화한다는 설명을 단순히 제시하지 말고 각 입장에 속해 있는 제시문의 핵심 논지를 적절히 활용하여 정당화의 근거를 제시한다면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소수자 우대 정책 찬성 입장을 정당화할 때는 기업의 인재 채용에 있어 여성과 같은 소수자를 배려하는 것이 공정 분배에 기초한 사회정의에 부합한다는 <제시문 3>의 논지가 A국 여성들의 경제 활동 지표로 입증된다는 점을 강조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소수자 우대 정책 반대 입장을 정당화할 때는 개인의 능력과 노력에 따른 공정한 경쟁과 성과에 대한 보상이 필요하다는 <제시문 2>의 논지가 B국의 경제 지표를 통해 실질적인 효과를 내고 있음이 확인된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 채점등급 】

- A : <자료 1>과 <자료 2>를 각각 정확하게 해석하고, 이를 근거로 [문제 1]의 두 입장을 각각 정당화하되 정당화 과정에서 제시문 논지를 활용하여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한 답안
- B : <자료 1>과 <자료 2>를 각각 정확하게 해석했으나 이를 근거로 [문제 1]의 두 입장을 단순히 옹호한 수준의 답안
- C : <자료 1>과 <자료 2>를 각각 정확하게 해석하는 데는 실패했으나, 자료를 활용하여 [문제 1]의 두 입장을 정당화한 답안
- D : <자료 1>과 <자료 2>를 각각 해석했으나 [문제 1]의 두 입장을 제대로 정당화하지 못한 답안
- E : 자료 해석도 부정확하고 [문제 1]의 두 입장을 정당화하지 못한 답안
- F : E 등급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답안

논술문제 해설지 (인문계)

[문제 3] 국가 C는 지방분권 및 국토균형발전과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지방 소재 공공기관의 경우 지역인재(해당 시·도 소재 대학 출신인 자) 채용 비율을 최소 30% 이상으로 의무화하고자 한다. 이 정책에 대한 찬성 및 반대 견해를 [문제 1]의 두 입장을 활용하여 각각 논술하시오.(30점)

【 채점지침 】

[문제 3]에서는 소수자 우대 정책의 대표적 사례라 할 수 있는 ‘지역인재 채용할당제’의 핵심 내용과 목표를 소개하고 이에 대한 찬성 및 반대 입장을 [문제 1]의 두 입장에 근거하여 논술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지역인재 채용할당제’의 목표와 내용을 정확하게 정리해야 한다. 지방 공공기관 채용에 있어 지방 대학 출신자 30% 이상 채용을 의무로 규정하는 지역인재 채용할당제는 지방분권, 균형발전, 일자리 창출 등을 목표로 한다. 이는 C국이 현재 인재의 수도권 집중과 수도권 출신 인재 중심 채용이 심화되어 지방 출신 인재의 입지가 좁아지는 문제점을 겪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 상황에서 지방 대학 출신자들은 소수자가 되어 취업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받지 못하게 된 것이다. 이는 인재를 국가 곳곳에서 고루 선발, 활용하여 지방자치와 경제를 활성화하고 일자리를 늘려 국토의 균형발전을 이루는데 방해가 될 수 있기에 C국 정부는 지방 공공기관 채용에서 지역인재 선발을 늘려 문제를 극복하려 한 것이다. 따라서 이 제도는 단순히 사회적 소수자들을 배려하는 정책을 넘어 소수자 우대를 통해 국가 운영에 필요한 동력을 확보하려는 노력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이 논제에서 소개한 정책의 주요 내용과 목표를 정확하게 정리한 다음 [문제 1]의 두 입장 모두를 활용하여 정책에 대한 찬성 및 반대 논의를 전개해야 한다. 기본적으로 소수자 우대 정책에 찬성하는 입장을 근거로 채용 정책을 지지하고, 우대 정책에 반대하는 입장을 근거로 채용 정책을 비판할 수 있을 것이다. 좋은 답안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소수자 우대 정책에 대한 찬반 입장을 채용 정책에 대한 찬반과 단순히 연결시키지 말고 우대 정책에 대한 각 제시문의 중심 논지를 구체적으로 활용하여 채용 정책이 갖는 의미와 효과를 분석한 다음 채용 정책을 통해 정책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인지를 검증하는 방식으로 논지를 전개하는 것이 필요하다. 각 입장에 근거한 채용 정책에 대한 찬반 견해는 다음과 같이 논술할 수 있을 것이다.

- ‘지역인재 채용할당제’에 찬성하는 견해

지역인재 채용할당제는 지방 인재 활용을 통한 일자리 증가와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한편 지방분권 강화를 통해 국토의 균형발전을 이끌 수 있다는 점에서 효과적인 소수자 우대정책이라 할 수 있다. 지역인재 채용할당제는 본의 아니게 소수자가 된 지방 대학 출신 인재를 단순히 우대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성장에 필요한 동력을 확보하는 효과적인 수단일 뿐만 아니라 사회정의에도 부합하는 정책인 것이다.

<제시문 1>에서는 같은 소수집단에 속하는 사람이 롤 모델이 될 때 효과적이라는 것을 강조한다. 이것은 지방 대학 출신자들이 일정 비율 이상으로 채용될 때 그 지방 대학 출신자들의 의욕과 역량을 최대한 끌어올려 요망되는 정책적 성과를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논술문제 해설지 (인문계)

또한 <제시문 3>은 기업이 사회 통합과 구성원의 복지 증진 의무, 즉, 사회정의에 대한 의무를 진다는 점을 강조하는바 지역인재 채용할당제 시행 주체인 지방 공공기관은 이 의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할 필요가 있다. 공공기관은 세금으로 국민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운영되기 때문이다. 지방 공공기관이 솔선하여 지역 인재를 채용한다면 국가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하고 지역 실정에 맞는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할 수 있음은 물론 사회정의 실현에도 이바지할 것이다. 그리고 이와 같은 지역인재 채용할당제를 통해 국토의 곳곳에서 인재를 고루 발굴, 활용한다면 지역 경제 활성화와 지방분권 강화를 통한 국토의 균형발전이라는 정책 목표를 달성하는 데도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지역인재 채용할당제는 지역 인재들에 대한 형평성 있는 기회 제공과 국가의 효율적인 운영이라는 점 모두에서 정당한 정책이다.

- ‘지역인재 채용할당제’에 반대하는 견해

지역인재 채용할당제는 정책 자체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힘들 뿐만 아니라 정책 목표달성이 힘들다는 점에서 시행을 중단해야 한다. 소수자를 부당하게 차별해서는 안 되지만 공공기관 인재 채용에 있어 특정인들을 의무적으로 선발하는 것은 합리적인 정책이라 할 수 없다.

이 제도는 개인의 노력과 능력에 기초한 공정 경쟁이 중요하다는 <제시문 2>의 논지에 위반된다. 공정 경쟁의 필요성 측면에서 볼 때 지방 대학 출신자를 소수자로 분류하고 의무채용 하는 것은 취업을 위해 노력한 다른 인재를 역차별 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나아가 노력과 능력에 기초한 선발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지방 공공기관의 경쟁력을 높이기 힘들 것이다. 이는 지방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통한 균형 있는 국가발전이라는 정책 목표달성이 힘들어 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지방 대학 출신 인재들이 소수자라 해도 이들을 구제하거나 우대해야 할 책임이 국가에 있는 것은 아니다. <제시문 4>가 강조한 책임과 보상의 원리에 따르면 지방 대학 출신 인재들이 상대적인 불이익을 겪는다 해서 이것을 사회의 책임이라 볼 수 없기 때문이다. 오히려 지방 대학 출신 인재들은 개인적 노력을 통해 상대적 불리함을 이겨내야 한다.

결국 지역인재 채용할당제는 지방 대학 출신자를 소수자로 분류하고 이들을 우대해야 한다는 잘 못된 전제에 기초해 있으며, 정책을 시행한다 해도 그 목표를 달성하기 힘들 것이다. 따라서 인위적으로 지방 대학 출신 인재를 의무채용 하는 우대 정책을 시행하기 보다는 지역 인재들이 경제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돕는 대안적인 정책을 도입하는 것이 지역 인재를 위하고 국가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는 방법이라 할 수 있다.

논술문제 해설지 (인문계)

【 채점등급 】

- A : ‘지역인재 채용할당제’의 목표와 핵심 내용을 정확하게 정리하고 [문제 1]의 두 입장 및 제시문 주요 논지를 고루 활용하여 정책에 대한 찬성 및 반대 입장을 구체적으로 논술한 답안
- B : ‘지역인재 채용할당제’의 목표와 핵심 내용을 정확하게 정리하고 [문제 1]의 두 입장에 근거하여 찬성 및 반대 입장을 논술하였으나, 제시문 내용을 활용한 구체적 논지 전개를 하지 못한 답안
- C : ‘지역인재 채용할당제’의 목표와 핵심 내용은 정확하게 정리하지 못하였으나 [문제 1]의 두 입장을 활용하여 찬성 및 반대 입장을 선명하게 논술한 답안
- D : ‘지역인재 채용할당제’의 목표와 핵심 내용은 정확하게 정리하였으나 [문제 1]의 두 입장에 근거하여 찬성 및 반대 입장을 제대로 논술하지 못한 답안
- E : ‘지역인재 채용할당제’의 목표와 핵심 내용을 정확하게 정리하지 못하고 [문제 1]의 두 입장에 근거하여 찬성 및 반대 입장을 제대로 논술 하지 못한 답안
- F : E 등급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답안